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wfw.or.kr | 2015.09.23.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막는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무회의 의결('15.9.8.)

01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3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은 차등
 - 서비스는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
- 이번 개정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목적
 -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현실에 맞게 차등화하고 업무정지명령을 대체하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제도를 마련

구분	변경 또는 신설
중단 혹은 제한 사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활동지원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관여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등을 제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활동지원기관의 급여비용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 위반정도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시 지정 취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부정 청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나 자격정지처분 3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설)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이용인과 활동보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강화
 -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992개소이며, 도내 기관은 156개소로 서울(159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지자체는 활동지원기관과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용자 준수사항(수칙)을 알리기 위해 집합교육, 홍보물 제작 등이 필요
 - 활동지원인력이 바우처의 올바른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시 법 규정에 관련한 내용과 사례 등을 집중 교육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 심사판정기관임

2. 지자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역화폐' 실험

01 주요 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들이 지역경제의 실질적 기여를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잇달아 발행하고 있음
 - 강원도는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강원화폐(GWCC: GangWon Community Currency)'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 성남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2015년 5월 현재 7,900여 곳으로, 성남시가 추진하는 생활임금제의 초과분예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임
- 지역화폐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의 상호교환의 촉진과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나, 중앙정부 등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법정단일화 체계에서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충돌 및 낮은 활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법정통화와 지역화폐와의 상환 체계 및 비율 등에 대한 낮은 현실가능성
 - 지역적 한정으로 인하여 통화의 규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사용횟수 및 빈도에 따라 비용발생률이 높고, 지역경제의 개방성 및 순환체계를 훼손
 - 기존 중앙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과 지역화폐와의 차별성, 지역화폐의 위변조 등 높은 보안 상 위험 정도로 인한 화폐 질서의 문란 등의 문제점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 매개체로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자원의 공유, 지역적·사회적 가치의 촉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 지역화폐를 통해 공동체의 다양한 주체를 경쟁자 아닌 공유자원으로 인식하여 이해집단, 세대 및 계급간 장벽을 완화하여 공동체(사회)통합에 기여
 - 공동체 내에서 생산된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공동체 내부의 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공동체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기여와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제로 '지역화폐'를 발행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도내 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의 일부 활용 가능
 - 경기도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을 지역화폐를 통해 일부 억제하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경제활동 촉진과 도민의 소득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제순환 수단인 지역화폐와 복지 영역을 결합한 복지지역화폐 등 새로운 유형의 발굴
 -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 등 기여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로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지급
 - 지역화폐를 통해 복지의 수혜자도 다른 서비스의 생산자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산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쌍방향적 복지로 복지 수혜자의 자존감 향상
- 공동체 회복과 지역의 순환적 사회적 자본의 실현을 위한 타임뱅크 형태의 시간화폐 도입
 - 시간화폐는 지역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이 서로 돕고 만들어가는 '교류'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 수행
 - 이러한 시간화폐의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효과 기대 가능

경기도는 지역 화폐의 쓰임새, 유통 체계, 비용 총당 및 수익모델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 검토 후 도입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우리동네 삶의 질 만족도 조사

'2015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는 지역발전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15.9.1.)

- 삶의 질은 지역발전·복지·교육·행복 등 인간 삶에 밀접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는 지표로는 OECD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있음
- 이번 조사는 '삶의 질' 개념을 '전반적 만족도'와 '분야별 만족도'로 구성하고,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2만 2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각 분야(전반적 만족도 및 12분야별 만족도)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조사단은 전반적 만족도에서 과천시·군포시 만족도가 높고 주택·복지·주민참여 분야에서 非 서울·경기지역의 시군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에 대해 '시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과천시)', '민관합동 맞춤형 복지서비스(장흥군)', '찾아가는 행복경로당(장성군)' 등 체감도 높은 지역맞춤형 정책의 효과로 해석

조사기간 : 6.5.~6.26.

조사결과 *12개 분야 중 복지관련

순위	전반적 만족도	복지 분야	주택 분야	안전 분야
1	경기 과천시 7.81	경기 과천시 7.83	전남 장흥군 7.88	경기 과천시 8.34
2	경기 군포시 7.62	전남 장흥군 7.16	경남 산청군 7.88	경북 청송군 8.24
3	서울 송파구 7.60	강원 양구군 7.16	서울 송파구 7.86	강원 고성군 8.06
4	서울 서초구 7.52	전남 장성군 7.14	경기 과천시 7.86	경남 산청군 8.02
5	대전 유성구 7.50	경기 군포시 7.07	대구 수성구 7.82	충남 계룡시 7.96
6	대구 수성구 7.46	경남 거창군 7.04	전남 순천시 7.81	경북 예천군 7.96
7	경기 고양시 7.46	서울 송파구 7.02	강원 횡성군 7.78	전남 구례군 7.94
8	서울 강남구 7.45	경북 청송군 6.98	충남 계룡시 7.78	전남 순천시 7.84
9	경기 성남시 7.31	전북 무주군 6.96	경남 거창군 7.76	강원 강릉시 7.84
10	전남 순천시 7.30	경기 의왕시 6.96	강원 강릉시 7.72	경남 함양군 7.82
순위	환경 분야	의료 분야	생활인프라 분야	주민참여 분야
1	경남 산청군 8.90	서울 송파구 7.93	서울 종로구 8.30	전남 장흥군 7.02
2	전남 장흥군 8.78	서울 강동구 7.85	경기 군포시 8.29	전남 장성군 6.82
3	강원 양양군 8.78	서울 강남구 7.83	서울 서초구 8.23	전북 무주군 6.72
4	강원 속초시 8.71	서울 서초구 7.78	서울 강동구 8.20	전북 진안군 6.58
5	전남 장성군 8.70	부산 서구 7.60	서울 송파구 8.20	경기 과천시 6.53
6	경북 청송군 8.66	전남 장성군 7.58	서울 강남구 8.15	강원 속초시 6.49
7	경기 양평군 8.63	광주 동구 7.56	서울 동대문구 8.11	강원 영월군 6.48
8	전남 진도군 8.62	부산 부산진구 7.50	부산 수영구 8.10	전남 진도군 6.46
9	강원 고성군 8.58	대전 서구 7.43	서울 노원구 8.09	경북 청송군 6.42
10	전남 구례군 8.56	대구 남구 7.39	경기 성남시 8.07	충남 청양군 6.40

2. 경기도, SIB방식으로 탈수급 복지사업 추진

- 경기도가 연내 SIB(Social Impact Bond)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과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SIB사업 및 탈수급 프로젝트에 대한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음.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 공공사업 SIB', '기초수급자 탈수급 프로젝트 해법'이라는 명칭이 결정됨
- 도는 오는 10월 도민 대상 SIB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초순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SIB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03 FACT CHECK

노인교통안전, 실버존 지정으로 해결되나?

-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는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으로 지정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교통법칙금이 2배 이상 부과(2015.1.1.시행)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 그러나 설치비용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스쿨존과는 달리 실버존 설치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 내 실버존은 69곳에 불과(스쿨존의 1/10 수준)
- 또한, 노인사고는 노인보호구역이 아닌 전통시장이나 공원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실제 2011~2013년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노인 사망자의 69.3%가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음
- 노인의 주요 통행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보행자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개선대책 필요
 -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에 대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기로 함
 - ※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
-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지역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를 빨간색으로 칠하거나, 과속방지턱 설치나 도로를 블록형태로 바꾸어 시속 30km/h이하로 운전하도록 적극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됨

*도로교통법 제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교통신문 9.11.기사.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사고 안 난다

*국민안전처 보도 자료('15.9.10.), 생활권 이면도로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04 통계로 보는 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월별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시·도별 이용자 수 및 이용액('13년 12.기준)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통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이용자 수는 2014년 1월 기준 전국 48,687명이며, 월 이용액은 505억5천6백만 원으로,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이용액의 변화가 나타남
- 시·도별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을 살펴보면, 서울이 10,521명(114억7천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9,263명(93억8천만 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올해 전국 228개소의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 명, 백만 원

*관련 통계는 1년 단위로 작성되어 매년 12월 발표